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9. 12. 6.(금) / 총 4 매(본문 3)
담당 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 과장 김석기, 사무관 박승연, 주무관 장휘량 ☎ (044)201-4740, (044)201-4868
보 도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 8.(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정부·지자체 함께, 노후 고시원·쪽방 직접 찾아나선다.

사·군·구 찾아가는 주거지원 조사팀 구성, 방문조사(19.12.9~'20.1.17)

공공임대주택 안내 및 이주희망 조사, 주거급여 등 지원수요 발굴

임대주택 1대1 상담, 생활집기·보증금·이사비 등 이주과정 전반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거환경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과 쪽방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복지 상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에 나선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으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 중인 이들을 위하여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단체와 함께 비주택 취약거처 방문 조사('19.12.9~'20.1.17)를 실시한다.

〈 이렇게 바뀔니다 〉

(지금은) 월세 30만원의 2평 쪽방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B씨는 공공임대 이주를 희망하나, 정보에 어둡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망설이고 있었다. 신청 서류·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러 가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신청을 포기하였다.

(앞으로는) 주거지원조사팀에서 찾아와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며, 냉장고·세탁기·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집이 월임대료 13만원 수준에 이주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었다. 입주의사를 밝히니 서류작성, 이사 등 모든 절차가 현장 지원되었다. 이주 후에는 주거복지센터와 지역 자활기관의 안내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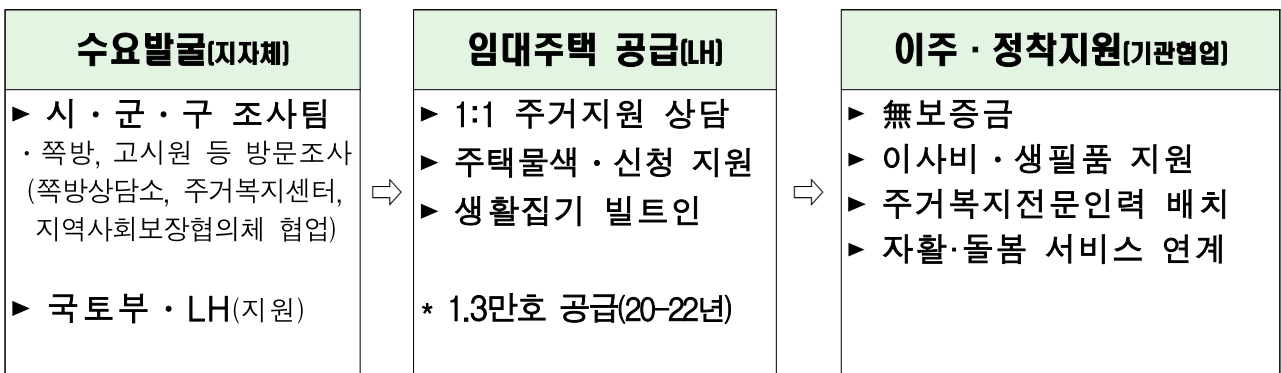
- 이번 방문조사는 10. 24.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이하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조사팀을 구성하여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안내 및 이주수요를 발굴한다.

- 주거지원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임대주택 이주 대상자는 '20년 상반기부터 1:1 상담과 안내를 통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할 계획이며,
 - *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매입·전세 → 영구임대까지 확대하고 2022년 까지 1.3만호 공급(年4천호)

- 주거복지재단·지역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제공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이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주 절차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하여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지원과 통합서비스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절차 〉



[참고]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정착 및 자활지원 방안

-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가 **협업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 *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지원) → 복지부(자활사업총괄) → 사업수행 총괄(자활복지개발원) → 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광역·지역자활센터)
- 주거복지전문인력(LH)을 배치하여 입주 오리엔테이션, 주거교육 등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지역 사회복지·의료기관 서비스와 연결
-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는 가사·간병서비스 및 동아리 활동 등 돌봄서비스와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 추진
 - * 자활복지개발원 수행(광역센터 14개소 170명, 지역센터 250개소 1,489명 운영)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전수조사 및 수요발굴 지원을 위하여 **조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합동 설명회를 개최**(12.9~12.13)하고, 주거지원 정책 공유와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 권역별 설명회(12.9~12.13, 호남권/ 경기권/ 경북권/ 경남권/ 서울권/ 충청권)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고시원 쪽방등에 거주하면서 공공임대주택입주 또는 주거급여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방문상담에 응하시거나 가까운 읍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실 것을 당부하고,
 -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실제 현장에서 촘촘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힘을 모아 주거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 044-201-474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비주택 1.3만 가구 ⇨ 전세 6.5천호 + 매입 5천호 + 영구·국민 1.5천호
 - (공공임대 우선지원 확대) 현행 年 2천호(매입·전세)에서 年 4천호 수준으로 공급 확대, 지원 주택도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
 - (맞춤형 주택공급)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을 빌트인 설치하고, 개별 이주를 꺼리는 경우를 감안, 집단 이주가 가능한 주택 확보 공급도 검토

나 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

- (이주비용 지원) 보증금·이사비 등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공헌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원
 - (보증금) 공공임대주택 무보증금 제도 확대, 서민주택금융재단 지원 등을 통해 자기 부담이 없도록 지원
 - (이사비·생필품) 주거복지재단과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이사비(20만원), 생필품(20만원)도 지원
- (이주절차 지원) 생필품 전달, 이사보조, 서류작성 등 현장 지원을 위해 취약주거지 밀집지역 인근에 '이주지원 119센터' 설치('20.1)

다 금융 및 주거급여 지원

- (노후 고시원 전용대출 신설) 안전·주거여건이 취약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가 민간주택 이주시 보증금 저리 융자(금리 연 1.8%, 5천만원限)

- ▶ (대상)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노 후고시원 3개월 이상거주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40백만원 이하)
- ▶ (대상주택)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주거급여 보장 강화) 저소득 가구 임대료 부담완화 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19, 44% → '20, 45%) 및 기준 임대료* 인상

* 지역별 7.5~14.3% 인상,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액 月 3.3만원 상향 효과

- 고시원 등 취약주거 청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 분리 지원('21~)